

# 대기환경 으뜸도시 전주 만든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공업지역 환경오염행위 감시 · 단속 강화

전주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감시를 실시하고, 공업지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과 드론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사업장이 실시하는 자가측정 외에도 추가로 오염도 감시를 실시하고, 배출허

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팔복동 공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민간환경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주·야간 순찰을 통해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악취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한 시는 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하고, 대기오염 심화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환경감시용 드론도 운용한다.

환경감시용 드론은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7개 항목(NO<sub>2</sub>, SO<sub>2</sub>, VOCs, CO, H<sub>2</sub>S, NH<sub>3</sub>, O<sub>3</sub>)을 측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 대기질 실태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강화된 지도·점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

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돕기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0일 까지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그간 법령에 한정된 관리 관행을 벗어나 대기오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 으뜸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 고객 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

### 전주시 완산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인 '호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1회 방문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해당 업무 경력자로 지정 운영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 복합민원, 각종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민원편의제도로, 구는 이를 위하여 대상 민원 접수시 9개 부서의 팀장급(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을 지원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올해 완산구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여 복잡한 민원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산구는 2022년 작년 한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38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반기별로 민원후견인을 재지정하여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람 기자

##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 갖고 소통 나서

경찰의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관리 위한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이 마련돼 공유됐다.

21일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60여 명과 함께 상관리포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올 한해 청문감사인권 기능의 업무추진 방향이 논의되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22년 주요성과 분석,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청문감사인권기능 혁신 방안 설명,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당부사항, 강황수 전북청장 특강 순으로 마무리 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문감사인권관의 역할 재정립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해 기본과 원칙이 바른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황수 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언어사용 등 실수를 보완·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참석한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모두가 전북경찰 조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전주화산체육관 길가에 피어난 개나리 절기상 춘분을 맞이한 21일 전주화산체육관 일대에 개나리가 만개해 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홍보

### 전주시 완산구, 관련사항 안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지난 13~17일 5일간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찾아 소비기한표시제 관련사항을 홍보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

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소전을 통한 잔비 방지와 제도인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 12. 31.)이 적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신규 품목제조·가공허려 할 때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나,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려는 경우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경아 기자

##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3월 22일 오전 10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기관별 역할 숙달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군산산업단지 내 도로

에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이 전도되어 폐질산 유출 및 인명피해가 발생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합동훈련은 환경부(화학안전과, 전북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훈련방법은 '사고상황공유'를 활용해 사진, 문자, 동영상 등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상황을 즉시 파악하며, 사고상황 전파·보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대피, 유출물질 차단·탐지, 잔류 오염도 조사 등 기관별 역할·임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한다.

또한,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동결과에 따른 사고지역

피해예측 범위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주민대피 및 경계구역 설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현주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람 기자

## 노인 돌봄·의료서비스 강화

###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전북 유일 선정

전주시가 한층 강화된 노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홍보 등 운영 준비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 왔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주민들이 사생활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돌봄·주거·영양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기 때문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마무리하고,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며, 복지부는 전주시를 포함한 총 12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해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고령층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주거지원과 건강관리, 이동·식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의료지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건강-의료 안전망,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 사례관리) △돌봄/생활지원(장기요양 방문재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영양지원, 이동지원, 가사지원) △주거지원(케어안심주택, 거점공간 운영, 주거환경개선 및 낙상예방 가정환경조성, 스마트돌봄)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 요소인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확충, 민·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 지원 활용의 초석을 마련했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주만의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